

/ 강원예코홈페어 2018 주택·건설·건축박람회 /

지역제품 저변 확대 건설업 활성화 발판

성과와 비전

강원도의 친환경 녹색성장을 위한 '강원예코홈페어 2018 주택·건설·건축박람회'가 지난 2일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10월31일부터 사흘간 춘천 불내체육관에서 펼쳐진 박람회는 도내 주택·건설 분야 생산업체와 지자체가 운영하는 80여개 부스로 조성됐다. 도내 유일한 주택·건설·건축종합박람회 명색에 걸맞게 최고 품질의 지역 건설자재와 기술이 총집합하는 홍보·관로 확대의 장이었다. 사흘간 총 1만여명의 관람객이 방문했으며 상담 건수는 2,000여건에 육박한 것으로 집계됐다.

3일간 1만여명 관람객 찾아 계약상담 건수 2,000건 달해 신기술·트렌드 발전적 공유 내수경제 회복 상당한 효과

■주택·건설업계 침체 극복 방한성 제시=이번 박람회는 평장을 립피 이후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주택·건설업계의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했다. 특히 건축자재, 욕실 및 주방용품, 창호재, 조명 및 공공시설 자재, 인테리어 제품, 가구 등 폭넓은 분야의 생산·제조업체가 '비즈니스스관'에 입점해 열띤 홍보·판매전을 펼쳤다. 또 참가업체들은 새

로운 기술, 트렌드와 애로사항 등을 공유하며 타개점을 모색했다. 특히 공무원이 상주하는 '비즈니스라운지'에서는 업체와 지자체 간 긴밀한 계약·상담이 이뤄지기도 했다.

■풍성한 부대행사와 관람객 즐거움 배기=이번 박람회는 지난해와 동일하게 접근성이 높은 춘천역 앞 불내체육관에서 진행됐다. 도민은 물론 수도권 투자자의 발길이 유입되며 도내 생산·자재의 활동 영역을 넓히는 데 기여했다. 또 박람회 기간 진행된 '스텝스 랠리'와 연계한 무료 커피 제공·캐리커처·푸짐한 경품 추첨 등의 행사는 관람객의 즐거움을 향상시켰다.

이번 박람회는 산하에 어우

러진 종합전시회 역할을 토했다. 특히 강원대 건축학과와 한국폴리텍대학 춘천캠퍼스 재학생들은 행사장 내 '산학협력관'에서 졸업작품 전시전을 선보여 기발한 아이디어 작품으로 큰 호평을 받았다.

■건설·건축산업 활성화 기폭제=강원예코홈페어 2018은 지역 산업의 기반인 건설·건축산업의 재도약에 단함을 실었다. 도내 우수 업체 간 상생발전 논의도 활발히 진행돼 잠재기를 이겨낼 단합의 공간이 됐다. 또 도내 지자체들의 지역 제품, 기술 활용도 향상을 이끌어 냈다. 이는 도내 업체들의 지역 이탈 방지와 내수 활성화에 상당한 효과를 나타낼 전망이다. **윤종현기자**

성공개최 숨은 주역



◇강원예코홈페어 2018 박람회장을 찾은 도 지역도시과 위홍섭 과장과 직원들이 포티팅을 외치고 있다.



◇강원예코홈페어 2018의 성공적인 개최를 이끈 춘천시 도시건설국 신연균 과장과 건축과 직원들.

업체-지자체 경제협력의 연결고리

도 건설교통국 지역도시과

강원예코홈페어 2018의 성공적인 개최에는 도 건설교통국(국장·박재명) 산하 지역도시과 직원들의 노력이 깃들어 있다.

지역도시과는 기본적인 박람회 추진을 비롯해 지역업체들의 참가 독려, 홍보 등 다방면적인 지원활동을 펼쳤다. 특히 지난달 31일 열린 개막식에서 실력과 흥성 3인조 어쿠스틱 밴드인 '아이보리 코스트'의 축하 공연을 지원하며 다채로운 개막식을 꾸미는 데 힘을 보탰다.

참가 업체와 공무원 간 실질적인

상담·계약 연결책을 도맡기도 했다. 지역도시과 직원들은 강원예코홈페어 2018 홍보포스터를 도청 청사 내 곳곳에 직접 게재하는 등 주택·건설 분야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박람회 방문을 독려했다. 또 박람회 운영사무국과 도내 주택·건설업체 명단을 공유하며 참가업체 확보에도 힘썼다.

위홍섭 도 지역도시과장은 "앞으로도 강원예코홈페어가 지역 건설·건축산업 활성화를 이끌고 우수한 주택·건설 자재를 널리 알리는 홍보·관로 확대의 장구 역할을 토포하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더 많은 기업·관람객 유치에 앞장

춘천시 도시건설국 건축과

신연균 춘천시 도시건설국장을 필두로 한 건축과 직원들의 든든한 지원은 강원예코홈페어 2018 성황의 밑거름이 됐다.

춘천시 건축과는 박람회 기간인 10월31일부터 지난 2일까지 하루도 빠짐 없이 행사장을 찾으며 남다른 애정을 쏟았다. 특히 이들은 70여개에 달하는 기업 부스를 직접 찾아 참가업체들의 애로 사항을 경청하고 개선을 제시하는 등 만족도 향상에 심혈을 기울였다. 또 참가기업과 지자체 공무원의 상담·계

약의 장인 '비즈니스 라운지'로 건축과 직원을 비롯한 타 과 직원들을 파견하며 원활한 소통의 창구를 마련하는 데 기여했다. 부적이는 박람회장을 만들기 위한 홍보 활동도 배 놓을 수 없다. 건축과 직원들은 강원예코홈페어 2018 홍보포스터를 관내 모든 아파트 단지에 게재하는 등 관람객 유치에 앞장섰다.

이남호 춘천시 건축과장은 "보다 많은 참가업체와 관람객을 유치하기 위한 각종 부대행사와 홍보활동을 펼쳐 발전을 거듭하는 강원예코홈페어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윤종현기자 jjong@kwnews.co.kr**

내일 강원경제인한마음대회

강원경제단체연합회와 도가 주최하는 '2018 강원경제인한마음대회'가 6일 오후 3시 평창 알펜시아리조트 컨벤션센터 2층에서 열린다.

강원경제인한마음대회는 도내 경제계 교류 활성화와 경제인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 올해 두 번째로 마련됐다. 주제는 '평화와 번영 강원시대, 우리가 주역입니다'이다. 신하림기자

침체 지속맨 지자체 세수감소, 강원경제 전반 직격탄

이슈 분석 정부의 대출규제 강화 등을 포함한 9-13 부동산종합대책으로 강원도내 아파트 거래량(계약일 기준)이 1년 새 50% 급감했다. 이사 극성수기인 10월이지만 오히려 울어들어 가장 거래량이 떨어져 관련업계의 충격이 더하다.

9·13 대책 직후 거래시장 급냉
10월 650건 전년비 53.8% 감소
최대 감소폭 속초 87% 하락

수도권 투기수요 진정세 전환
강원경제 기반 건설경기 둔화
인테리어·이사업계 피해 불가피

■10월 아파트 거래량 연중 최저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계약일 기준) 자료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 10월 강원 아파트 거래량은 650건이다. 이는 9·13 부동산대책이 발표돼 시장이 급냉하면서 거래 절벽을 실감했던 9월(952건)보다도 약 30%인 302건이 감소한 수치다. 월평균 1051건을 기록하던 매매 거래량이 올해 가장 큰 폭으로 급감하며 올해 처음으로 900건 아래로 떨어졌다.

올해 초 집값 상승 후 지난 2분기(4~6월)에 4월 1075건, 5월 1004건, 6월 1459건 등 월평균 1000건 이상을 유지하며 안정화 추세를 보이던 강원 아파트 거래량은 7월 기록적인 폭염에 여름 성수기라는 지역특성 영향으로 주춤하다 8월 다시 회복세를 보였다. 7월 926건에서 8월 1052건으로 1000건대를 기록했다.

하지만 9·13 대책 이후 약한 달간 거래 냉각기가 이어지면서 10월 거래량은 울어들어 관련 통계 집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 10월과 비교하면 1417건에서 올해 650건으로 53.8% 감소했다. 특히 최근 들어 집값이 많이 오른 지역의 10월 거래량이 전년 동기 대비 크게 줄었다. 수도권과의 접근성 개선으로 고공행진을 이어가던 속초는 지난해 10월 430건에서 올 10월 56건으로 87% 감소했다. 춘천은 249건에서 101건으로 59.5%, 강릉도 146건에서 78건으로 46.6% 감소했다. 원주는 271건에서 184건으로 32.2% 거래가 떨어졌다.

10월 아파트 매매 거래량이 60% 가까이 떨어진 춘천의 경우 퇴계동 A아파트(전용면적 84.9877㎡) 18층이 2억5500만원에 거래됐다. 이 아파트 단지 같은 층, 같은 평수 아파트가 지난해 10월 2억9000만원에 거래된 것과 비교하면 1년 새 3500만원이 빠진 것이다. 주택 매매 가격 전망지수도 급락했다. 당분간 집값이 하락할 것이라고 보는 일선 중개업소가 많다는 의미다. 매수우위지수도 크게 내려가 집을 팔겠다는 사람이 종전보다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4일 국민은행의 부동산 플랫폼 'KB부동산 리브온'이 발표한 10월 강원지역 주택 매매가격 전

10월 아파트 거래 감소 현황

출처/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2017년	2018년	감소율
속초	430건	56건	87.0%
춘천	249건	101건	59.5%
강릉	146건	78건	46.6%
원주	271건	184건	32.2%

9월 도내 건설 수주 감소 현황



9월 강원 민간분야 건설공사량 감소 현황



망지수는 전국에서 두번째로 낮은 71.2를 기록했다.

■부동산발(發)경기 침체는 막아야

9·13대책은 수도권의 부동산 투기 수요를 진정시키는 데 성공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강화된 대출 규제 적용과 아파트 구매 심리 저하에 따른 지역의 전반적인 경기 침체를 막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특히 강원 경제를 떠받치고 있는 지역건설경기 둔화는 지역 산업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다. 4일 동북통계청에 따르면 민간 발주 공사 감소로 지난 9월 강원지역 건설 수주액은 전년동월(5442억9600만원)보다 61.2%(3333억2400만원) 감소한 2109억7200만원에 그쳤다. 같은기간 전국 감소율 6.5%의 10배 수준이다. 이는 지난 9월 도내 민간분야의 건설공사량이 비교적 크게 줄었기 때문이다. 9월 민간분야의 경우 지난해 5014억6700만원에서 올 830억8400만원으로 4183억8300만원 줄면서 83.4%의 감소율을 보였다.

아파트 매매량이 급감하며 부동산 시장뿐만 아니라 아파트와 연관된 다른 업종의 피해도 불가피한 상황이다. 도배·장판 등 인테리어 업계는 물론 이사업계 등은 아파트 거래량이 지금처럼 감소세가 지속될 경우 직격탄을 피할 수 없다. 아파트 매도를 검토 중이던 기존 주택자들이 아파트 매도 시기를 늦추거나 무주택자들이 아파트 매수 대신 전·월세로 돌아설 경우 타격이 불가피하다.

아파트 거래 절벽이 장기화할 경우 그동안 활발한 아파트 매매로 부동산 취득세와 등록세 수입이 늘었던 지자체들 역시 일정 부분 세수 감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호 leeho@kado.net



정부 9·13 부동산 종합대책 영향으로 도내 10월 아파트 거래량이 전년비 50% 줄었다. 사진은 춘천에 신축 중인 아파트 단지 모습.



“SOC 투자 확대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민간투자사업 활성화가 필요하다.”

(정성호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예산 심의 때 SOC 분야를 5000억원 이상 늘려 반드시 정상화시키겠다.”

(박순자 국회 국토교통위원장)

“적정 공사비 확보와 입·낙찰제도 개선이 시급하다.”

(박명재 자유한국당 의원)

“건설 시공업자에서 도시 디벨로퍼로 변화해야 한다.”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

“SOC 투자 늘려 경제 회복시켜야”

2018 건설 CEO 미래전략포럼
여야 의원·건설단체 한목소리
건설산업 혁신 방안도 논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와 국토교통위원회를 이끌고 있는 위원장과 여·야 의원들이 한목소리로 건설산업 혁신과 SOC(사회기반시설) 투자 정상화를 촉구했다.

대한건설협회(회장 유주현)는 지난 1~2일 제주 서귀포 롯데호텔에서 ‘2018 건설산업 CEO 미래전략포럼’(사진)을 개최했다.

올해로 16회째를 맞은 이번 행사에서는 건설업체 CEO, 건설단체장, 국회와 국토교통부를 비롯한 정부부처 관계자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건설산업! 혁신성장에서 길을 찾다’를 주제로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특히, 박순자 국회 국토교통위원장, 정성호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박명재 자유한국당 의원과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특별연사로 나서 건설산업의 새로운 패러다임 구축과 혁신방안을 논의하고, 미래산업으로의 도약을 제안했다.

정성호 기재위원장은 “미국, 영국, 브라질 등 세계 주요 국가들이 경기 부양책으로 SOC 투자를 늘리고 있다”며 “고용과 투자가 동반 침체를 겪고 있는 대한민국도 과감한 SOC 투자로 경제를 회복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순자 국토위원장은 “건설산업이 위기라고 하지만 진짜 위기는 4차 산업혁명이 현실화되고 있다는 것”이라며 “공장 제작, 자동화 등에 맞서 건설산업도 끊임없는 혁신과 도전을 통해 새로운 건설산업 100년을 준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참석자들은 건설업계의 당면 과제를 함께 고민하고, 혁신의 실마리를 찾기 위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이튿날(2일)에는 김원중 단국대 한문교육학과 교수가 ‘동양고전에서 본 리더의 통찰력’을 주제로 건설사 CEO들을 대상으로 리더십 강연을 진행했다.

유주현 대한건설협회 회장은 “최근 산업 간 경계선이 없어지고 있어, 융합적 사고를 바탕으로 한 혁신성장만이 대안”이라며, 업계의 적극적인 변화 시도를 주문하는 동시에 정부와 국회에는 과감한 규제 개혁을 당부했다.

김태형기자 kth@